소득대체율 등 갈등 고조 與野 '무제한 토론' 맞불

연금개혁

모수·구조개혁 등 견해차 확인
與, 토론 제안… 野 "속히 진행"

연금개혁을 놓고 정치권이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 시내의 한 국민연금공단 지사. /뉴시스

'연금개혁'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여·야가 연금개혁에 대한 견해차를 재확인하면서 쟁점이 소득대체율, 협의체, 구조개혁으로 확대된 가운데 여·야는 연금개혁을 비롯한 정치 현안을 논의하는 '무제한 토론회'에서 맞붙을 전망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여·야는 '연금개혁' 논의를 위한 비공개 실무 회의를 진행했다. 양당 정책위의장 및 보건복지위 간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한 회의에서는 여·야 간 견해차가 분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0일 여·야·정 협의체에서 여·야가 일부 합의를 이룬 것과는 대조적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 20일 정부와 국회, 여·야 대표가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에서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당시 여·야의 견해차가 좁혀지면서 일각에서는 연금개혁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실무회의에서 견해차를 재확인하면서 연금개혁 논의는 다시 교착 국면에 진입했다. 현재 쟁점은 ▲소득대체율 인상 ▲연금특위 출범 ▲구조개혁 추진 등이다.

야당은 현행 소득대체율(40%)을 44~45%까지 높이고, 구조개혁은 별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또한 여·야가 현행 보험료율(9%)을 13%까지 인상하는 데에 합의를 이룬 만큼,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에서 모수개혁을 우선 처리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소득대체율의 마지노선으로 43%를 제시했다. 또한 모수개혁만으로 재정 지속성을 담보하기 힘든 만큼,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또한 광범위한 논의가 필요한 만큼, 유관 부처가 참여하는 '연금특위' 출범을 주장하고 있다.

야당은 합의안 도출에 실패할 경우, 모수개혁안을 2월 내에 야당 단독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연금개혁에는) 반드시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구조개혁도 시급하지만, 모수개혁을 놓고 여·야 의견차가 소득대체율 1%포인트(p) 차이에 불과한 만큼 (민주당이) 단독 처리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여당은 연금개혁 단독 처리는 유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희숙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장은 "연금개혁을 하나의 당이 강행해서 혼자 처리하는 것은 동서고금에 없는 일"이라며 "연금개혁이라는 건 국가 전체 미래를 위해 너무 중요한 일인 만큼, 합의를 통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강조했다.

여당은 야당에 연금개혁을 포함한 주요 현안을 아우르는 '무제한 토론'을 제안했다. 전날 이재명 대표가 권성동 원내대표에 상속세 관련 토론을 제안했던 만큼, 모든 현안을 논의하는 토론을 역제안한 것.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형식은 자유고 주제도 자유"라며 "상속세뿐만 아니라 반도체특별법, 여야정 협의체에서 합의를 못 본 국민연금법 등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면의 현안에 대해서 끝장토론을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토론회를) 최대한 빨리 진행하자"라며 "(원내대표 제안이면 민주당도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게 맞는 만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까지 다 포함해 3대3 토론회를 진행하자"라고 맞섰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재계, 경영활동 위축 우려 "자본시장법부터 바꿔어야"

상법 개정

'핀셋 규제' 통한 효율적인 대응 강조
"투기자본 공격 등 리스크 높아질 수 있어"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여당과 재계의 반발이 거세다. 민주당은 주주충실의무를 앞세워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재계에서는 기업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킨다며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현행의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주주 보호를 통한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상법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의 근본적 원인인 불공정 합병 대규모 유상증자 등 기업들의 주주가치 훼손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소액주주들도 민주당의 입장을 크게 지지하고 있다. 상법 개정만큼 소액주주를 확실히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반면 여당은 주주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은 공감하지만 상법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주주 이익을 보호하고 기업 인수·합병이나 물적 분할 과정에서 일반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가장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곳은 재계다. 경영환경이 대내외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기업경영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상법 개정안을 섣불리 논의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할 경우 ▲이사에 대한 불필요한 소송 남발 ▲이사의 의사결정 지연에 따른 신사업 진출 저하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 확대 등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서는 상법 개정이 아닌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핀셋 규제'를 도입해 주주보호에 나서는 것이 기업 안정성과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효율적 방법이기 때문이다.

A 대기업 관계자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될 시 투자, M&A 등으로 불이익 받았다고 판단한 일부 주주들이 배임죄 고발 등을 통해 소송을 남발해 법적 리스크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사들은 책임지지 않기 위해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않을 것이고, 결국 기업의 성장 저해와 밸류업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상법이 개정되면 특히 경영권 공격에 노출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들부터 투자와 R&D에 써야 할 재원을 경영권 방어에 허비하게 되기 때문에 창업으로부터 중소·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생태계 육성과 경제활력 제고는 더 요원해질 것"이라며 "본 회의서 개정안이 통과가 될 경우 서명서나 호소문을 통해 입장을 내놓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한국경제인협회를 비롯한 경제8단체는 지난 16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기업 지배구조 규제 강화 법안이 다수 발의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뉴시스